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30
----------	------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이해식 · 이상현 · 허영
김종민 · 서영교 · 인재근
김윤덕 · 윤준병 · 서영석
임호선 · 김원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상수신자료를 즉각 열람토록 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현재 관제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다 보니 경찰공무원 파견 등에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공조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피부착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특정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법무부장관은 피부착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특정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u></p>